광주시, KTX·광주공항·도시철도·갬코 이달내 결론낸다

윤시장 간부회의서 취임 100일까지 주요 현안 추진 당부

"지역 축제 5·10월 집중 바람직… 기초질서 바로 잡아야"

윤장현 광주시장이 KTX 광주역 진입 문제와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여부, 국제 사기논란에 휩싸인 갬코 사건 등 각종 현안 사업에 대해 이번 달 안에 결론 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시장은 15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인수위 때 제시된 안을 바탕으로 시청 조직에 들어와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고쳐 가야할 점 등을 살펴보고 있으며, 취임 100일(10월 8일)을 기점으로 시민에게 민선 6기 4년간의 큰 골격, 플랜을 말씀드리겠다고 약속했다"며 "이제 약속드린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실·국에서는 속도감 있게 차질없이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시장은 특히 "(취임 100일 전까지 정리해야할 일에는) KTX, 광주공항, 도시철도, 갬코, 재정문제 등이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윤 시장 취임 후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현안 사업들로, KTX는 광주역 역방향 진입문제로 지역 여론이 분열돼 있으며 도시철도 2호선은 건설 여부와 방식 등을 놓고 원점에서 재검토 중이다. 민선 5기 때 국제투자사기 의혹을 받은 갬코(한미합작투자사업) 분쟁도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소송 취하 여부를 고려중이다.

윤 시장이 지난 11일 광주시청 출입기자 간담회에 이어 이번 확대간부회에서도 지역 내 각종 현안의 방향을 취임 100일에 맞춰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함에 따라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시장은 또 산발적으로 진행되는 지역 축제와 기초 질서 위반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축제가 연중 분산돼 집중도와 시민참여도, 외지인의 광주방문에도 애로가 있다. 축제의 계절인 5월과 10월, 양축으로 나눠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으며, "광주 도심에 불법 플래카드가 난무하고 주정차 위반이 급증하고 있다. 시청도 위반하고 있다"면서 "이는 반문화, 반공동체적 행위"라며 즉시 조치를 지시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지역현안사업 예산 지원 요청

이낙연지사, 광주·전남국회의원에

이낙연 전남지사는 15일 서울 여의도에서 광주·전남 국회의원들과 만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증액이 필요한 지역 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 지사는 ▲호남고속철도(송정~목포)와 보성~임성 철도 건설 ▲광주~완도 고속도로 건설 ▲벌교~주암 국도 4차로 확장과 박근혜대통령 공약사업인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 ▲비파괴검사 기술연구소 설립 ▲뿌리기술지원센터 기반 구축 등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부탁했다.

또한 진도군민의 숙원인 군내~서망항 국도 4차로 확장과 국립난대식물원 조성, 전복·해삼 양식단지 조성 등에 대해서도 국회 차원의 관심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과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을 포함해 광주 국회의원 7명, 전남 국회의원 10명 등 17명이 참석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이낙연 전남도지사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2015년도 지역현안사업'을 설명한 뒤 국회차원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전남도 제공〉

전남도, 해양헬스케어단지 유치전

전남도가 미래 성장 동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해양헬스케어단지 조성사업 유치 활동을 적극 나서기로 했다. 해양헬스케어단지는 해양 기후, 해수, 해조류, 갯벌, 소금 등의 다양한 해양자원을 활용해 신체와 정신 건강을 증진하는 사업으로, 전남에 유치될 경우 단순 치유 목적의 해양자원 활용을 넘어 침체된 전남의 해양관광산업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020년까지 전국에 4개소의 해양헬스케어단지 조성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전남도는 도내에 2219개의 섬, 1037㎢의 갯벌, 6475km의 해안선 등 풍부한 해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여건과 장점을 잘 부각시키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전남도는 내년 상반기 중 '해양헬스케어단지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단지 조성에 적합한 장소를 발굴하고, 해당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유치 당위성과 지역 여론을 형성할 방침이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전남도-영광군, 한빛원전 방사능 대책본부 운영

도·22개 시군, 자체 안전관리추진단 구성

전남도와 22개 시·군은 자체 안전관리 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또 전남도와 영광군은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방사능 방재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재난위험시설물 전수점검 횟수를 연 2회에서 4회로 늘리기로 했다.

전남도는 15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안전관리 종합 대책을 김영선 전남도행정부지사가 주최하는 22개 시·군 부단체장 회의에서 제시했다.

안전관리 종합 대책에 따르면 도는 행정부지사를 추진단장으로 하고 추진단장 아래 3개 팀(총괄기획팀·현장점검팀·상황관리팀)으로 구성된 안전관리 추진단을 운영한다.

22개 시·군도 부단체장을 추진단장으로 하고 안전행정국장 또는 과장이 간사를 맡는 안전관리 추진단을 구성한다. 안전관리 추진단은 안전관리 종합 대책을 추진하고 추진 상황을 점검·관리한다.

전남도와 영광군은 지역방사능 방재대책본부를 운영해 한빛원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주민보호 조치 업무를 하기로 했다. 방사능 방재대책본부장은 전남도지사가 맡는다.

도는 한빛원전 방사선 감시망을 현재 13곳에서 22곳으로 늘리고 방사선 분석기도 도입하기로 했다.

대피소도 현재 25곳에서 64곳으로 늘리고 개인보호복과 방호 약품 등을 추가로 확보하는 한편 지자체 훈련 주기도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 '화약고'로 불리는 여수산단의 화학재난 안전대책 일환으로 위험물·폐기물·대기오염·수질오염 등에 대한 행정지도·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재난위험시설물 전수점검 횟수를 연 2회에서 4회로 늘리고 도민 안전점검 청구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전남도는 정부 표준조례(안)과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 사례를 적용한 초기대응 매뉴얼을 반영해 '전라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의 전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조정실장이 맡았던 총괄조정관을 폐지하고 안전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총괄지원관을 맡도록 하는 등 지휘계층을 축소하고 지원기능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사회적 재난에 대해서도 지방비로 피해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전남도는 오는 30일까지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오는 10월13일 도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광주시장 취임식 비용 절감

장애인 10명에 전동침대 선물

광주시가 민선 6기 시장 취임식 간소화에 따라 절감한 예산으로 중증 장애인에게 전동 침대를 선물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15일 "저소득 와상 중증장애인 10명에게 200만원 안팎의 전동침대를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전동침대는 윤장현 시장이 지난 7월 1일 취임 후 첫 일정으로 중증장애인 가정을 방문한 자리에서 '전동침대가 필요하지만 고가여서 애로가 크다'는 말을 듣고 지원 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윤 시장은 앞서 중증장애인 가족의 건의에 따라 신안 증도 엘도라도 리조트로 1박 2일 일정의 가족 여행을 보내주기도 했다.

현재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사업에서 전동침대는 지원 품목이 아니어서 장애인들이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동침대 지원 대상은 광주지역 1~2급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다.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구별로 1~3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광주지역 1~2급 중증장애인은 6000여명에 이르며, 이 가운데 거동이 어려운 와상 장애인은 3000여명 정도다.

광주시 관계자는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품목에 전동침대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애초 취임식 비용 5000만원 중 100만원만 사용하고 4900만원을 남겼다. 광주시는 민선 6기 소외된 이웃과 사회적 약자의 벗이 되겠다는 원칙과 시민복지 강화 정책을 반영해 취임식 절감 비용 중 2000만원을 전동침대 지원에 활용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기협-아시아 문화개발원

문화전당 활성화 토론회

내년 9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과 연계해 지역발전 방안을 찾는 토론회가 열린다.

아시아문화개발원과 광주전남기자협회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지역의 길을 묻다' 세미나를 18일 오전 9시30분 전남대학교 용봉홀에서 개최한다.

행사에는 학계와 지자체, 언론계, 문화예술계 전문가들이 모여 문화전당의 관광마케팅 전략과 지역 문화전당 주변 활성화 방안 등을 놓고 토론한다. 광주시, 전남도는 상생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강신겸 교수는 '문화전당의 관광마케팅 전략'을 전남대 건축학부 유우상 교수는 '문화전당 주변 디자인 및 활성화 전략', 광남일보 김옥조 편집국장은 '문화전당의 효율적 조직운영 방안'에 대해 발제한다.

토론에는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 현장 활동가, 지자체, 지역 문화예술계, 전당 관련 선행연구자 등 15명이 참여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